

물류업 (비중확대/Maintain)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단가 인상, 업체간 차별화 가속화

- 국토교통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택배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산업 육성
- 택배 단가 인상, 공급 규제, 고정비 절감 예상
- 하위 업체 원가 부담 상승, 대형사 위주의 업계재편 가속화 전망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택배서비스 발전방안(보고서 3페이지 참조)”을 발표했다. 1) 택배 종사자 보호, 2) 소비자 보호, 3) 산업 육성으로 나뉘는 7개 세부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방안은 1) 택배 단가 인상 2) 공급 규제, 3) 고정비 절감 등 택배사의 영업환경 개선의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서는 대형사 위주의 업계 재편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 단가 인상 가능성: 마진 개선 가능성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을 지불하였으나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금액은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신고제를 도입하면 실제 지불 금액을 고지하게 된다. 이른바 온라인 쇼핑물의 “백마진 관행”의 개선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실질 단가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부 고객(쇼핑몰)이 낮은 단가를 고수하면서 소비자에게 받는 금액을 낮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 택배 서비스 품질 저하를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택배기사의 수입 증가, 택배사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과 소비자 보호: 대형사 위주의 업계 재편

표준계약서 시행시 택배기사의 근로시간이 줄어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택배사, 특히 중소형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형사 중 일부는 이미 서브터미널 자동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노동력 저감 기술 개발** 역시, 핵심은 결국 터미널 작업(상하차 작업)의 자동화이다. 기술 개발 역량이 있는 대형업체에는 자동화에 따른 고정비 절감의 여지를 마련해줄 것이다.

소비자 보호방안은 배상 정책 개선, 택배 종사자 자격 요건 강화가 요지이다. 이는 원가 인상, 택배기사 수급 악화로 귀결될 것이다. 택배 차량 전면 등록제 역시 택배 기사 수급을 어렵게 할 것이다. 하지만, 대형사는 물동량을 바탕으로 택배기사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원가 상승을 단가 인상을 통해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택배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유지

물류업, 특히 택배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당사가 2018년 운송 전망 보고서(11월 14일: 확대되는 경쟁, 플랫폼을 지배하라)에서 밝혔던 택배단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수혜는 차별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효율적인 라스트마일 배송 체계를 갖추고 공급자(택배기사, 대리점 등)에 대한 협상력을 갖춘 대형사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현시점은 아직 정책 집행 초기 단계로서, 전면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책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맞춘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요약)

[택배 종사자 보호]

1)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
-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

2)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노동력 저감기술 개발

-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
-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개발 착수
-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기술개발 추진. 생산성 확대될 것으로 전망

3)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

-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

[소비자 만족도 제고]

4)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

-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제

5) 서비스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증대

- 1인가구가 증가로 인한 택배 수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업체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추진
- 전자상거래 영역에 택배 서비스평가 진행
- '콜센터 연결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택배 차량을 허가 시 콜센터가 잘 갖추어진 업체에만 허가

[산업의 혁신적 성장]

6) 택배차량 신규허가 등 화물시장 진입 규제 완화

-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년부터 '택배용 차량(배)' 허가를 신규로 부여
-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
-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현, 10억 원) 규정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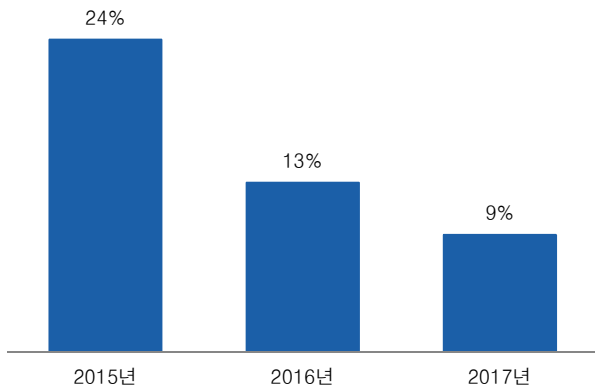
7) 실버택배, 드론택배 등 지원 확대

- 고령자들의 복지 실현을 위해 실버택배를 적극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
- 산간, 오지에 택배사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공동배송을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 추진

물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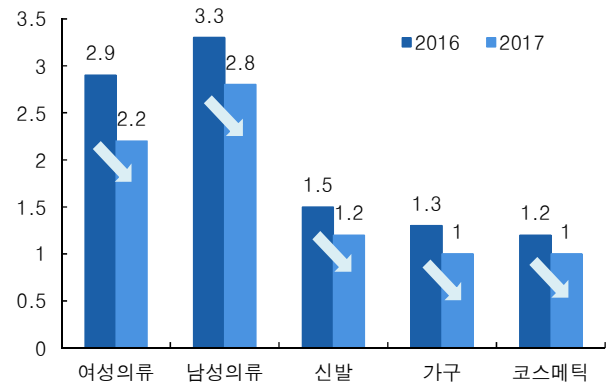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단가 인상, 업체간 차별화 가속화

그림 1. 모바일 장바구니 상품 담은 비율: 그만큼 손쉬워진 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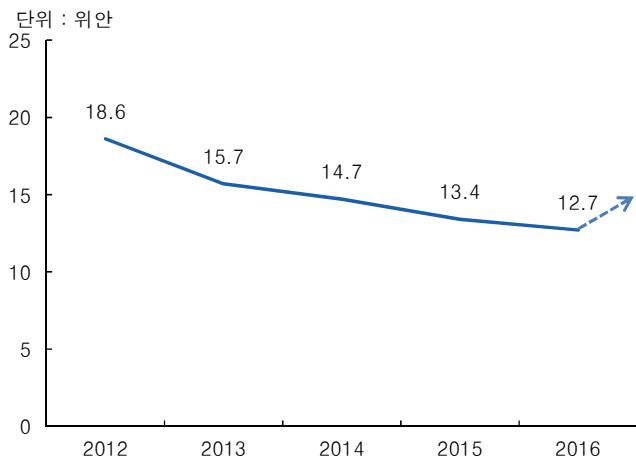
자료: 언론기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2. 주문 건 별 구매상품 수: 부담 없는 주문, 낮은 배송비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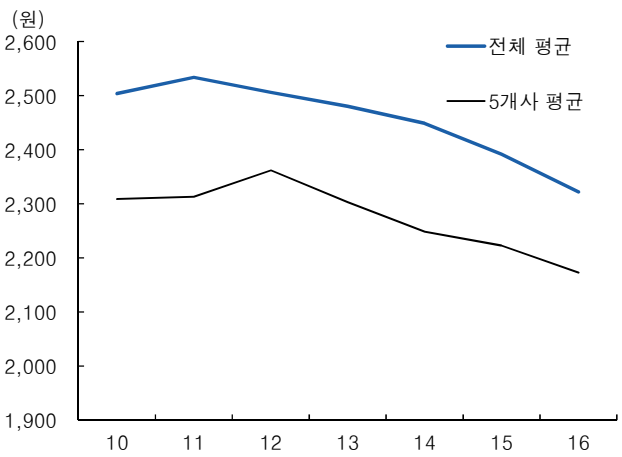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3. 중국 택배 단가 추이: 단가 인상 단행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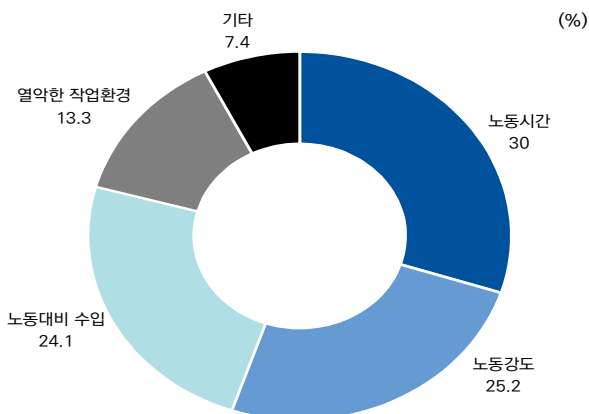
그림 4. 한국 택배 단가 추이



주: 상위 5개사 (한진, CJ대한통운, 현대, 로젠, 우체국)의 평균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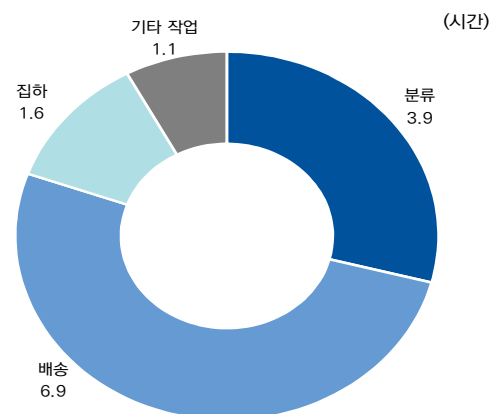
자료: 2017 물류산업총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5. 택배기사 이직 의사가 있는 이유



자료: 언론기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6. 택배기사 세부 작업 별 소요시간



자료: 각 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물류업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단가 인상, 업체간 차별화 가속화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